

계층분석방법(AHP)을 이용한 약용작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노재선¹, 김민아², 민선형³, 안영섭⁴, 김영국⁵, 김규호^{6*}¹서울대학교 교수, ^{2,3}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4,5}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⁶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연구목적 (Objectives)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함은 물론 약용작물 수요 역시 늘고 있다. 또한 농산업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약용작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약용작물 부문에 대한 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나름의 전망 하에 채택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역별 중복성 및 상호비일관성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부분 약용작물 산업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생산 부문 자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약용작물을 통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농업 부문이고, 따라서 차제에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약용작물에 특화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판단 위에서, 주요 시·도의 약용작물 정책 담당자와 민간 리더를 대상으로 소수 전문가 조사에 효과적인 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한 설문을 실시·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은 물론, 향후 약용작물 생산 활성화 및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 및 방법 (Data and Methods)

설문 대상을 크게 관(官)과 민(民)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담당자와 주요 약용작물 생산자 리더 등을 대상으로 E-mail과 팩스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官)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와 제천, 산청, 장흥 등 한방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시·군의 관련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기준을 충족하는 12부를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민(民)의 경우, 전국 생산자조직 및 주요 약용작물 생산자조직의 리더, 생약협동조합 관계자, 유통 관계자, GAP 작목반장 등 다양한 부문의 약용작물 전문가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역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기준을 충족하는 12부가 집중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약용작물 생산 활성화 및 산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의 수립 기준으로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능률성’, ‘정책의 실행가능성’ 등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하여, 각각의 정책수립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관(官)과 민(民) 각각의 그룹별 및 총 설문대상자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
* 교신저자 : 김규호, E-mail : towind95@snu.ac.kr, Tel : 02-880-4731

이후 본 연구진이 토론과 자문을 통해 선정한 14개의 정책 및 그 세부내용을 제시한 후, 앞서 질문한 정책 수립 기준에 비추어 중요도를 판단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가중치) 역시 관(官)과 민(民) 각각의 그룹별 및 총 설문대상자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끝으로 정책수립기준별 가중치 및 각 정책 프로그램별 가중치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14개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Results)

관(官)과 민(民) 그룹 모두 정책수립기준으로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어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능률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官)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의 적합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었으며, 민(民)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정책의 능률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었다. 이는 명분과 공정성 등을 상대적으로 숙고해야하는 정책 담당자의 입장과, 실제 현실 속에서의 명시적인 정책 효과에 상대적으로 주목하는 민간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14개 정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도출한 가중치 역시 관(官)과 민(民) 그룹이 차이를 보였다. 관(官) 그룹의 경우,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우수품종 보존 및 개발’, ‘기능성 물질 탐색 및 효능 연구’ 등 R&D와 관련된 정책 수단의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민(民) 그룹의 경우,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수입약용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생산 및 수입과 관련된 정책 수단의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 한약재 및 식품 유통에 대한 통관절차와 규제 등의 정비’와 ‘수입약용작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약용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의 순위가 민(民) 그룹에서는 3위였으나 관(官) 그룹에서는 14위로 나타나 양 그룹이 상당한 인식 차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끝으로 양 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GAP 재배 보급 및 확산’,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지역별 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이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각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약용작물 생산·유통 현장에서 인정받은 민간 리더들을 대상으로 삼아 향후 국가(특히, 농림수산물부) 차원에서의 약용작물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판단해 본 의의가 있으며, 이는 종합적인 약용작물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